

# 이제는 그만 풀어야 하지 않나?

## 지켜야 할 최소가 있다!

“같은 용도에 다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한번 사용하도록 고안된 제품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제품.” 이는 자원절약법 제2조 제10호에 명기된 ‘1회용품’에 대한 정의이다. 요즘 이 1회용품들에 대한 규제가 망아지 고삐 풀리듯 줄줄이 풀리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 커피전문점 등에서 사용하는 1회용종이컵에 이어 합성수지로 만들어진 1회용 도시락, 종이쇼핑백 사용을 금지한 규제가 전면 해제됐다.

국민의식의 변화 등으로 1회용 종이컵과 종이쇼핑백이 제대로 재활용되고 있으며,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는 대체재질의 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개정이유로 밝혔다.

하지만 현재 1회용품이 얼마만큼 분리수거와 재활용되고 있는지, 매일매일 먹는 1회용 도시락에서는 과연 인체에 유해한 환경호르몬(다이옥신 등)이 검출되지 않는 것인지 등에 대한 검증은 아직 미지수다.

또한 그간 정부가 약속했던 폐기물 줄이기 정책이 이로써 허공에 뜬 구름 잡는 소리가 된 것이다.

규제를 완화하기 이전에 1회용품을 대체하는 친환경대체기술과 실용화 노력이 더 있었는지?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는 대체재질의 확보를 위한 노력이 최소한 비닐쇼핑백 규제를 풀기 전에 재활용 되지 않는 비닐코팅을 금지하는 조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지 않았나? 전문가들의 이러한 지적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질적인 정책효과가 없는 규제나 국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는 전시행정은 합리적으로 재정비되어야 함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한 나라의 정책을 바꾸는 것은 속도전이 아니라는 것이다. 마치 준비된 것인 양 속속속결로 규제완화를 외치는 것은 일관성이나 원칙을 잃어버린 급한 행정이요, 이러한 행정은 국민들을 설득시키지 못한다.

조급한 성과주의에 빠져 추진한 밀어붙이기식 규제완화 정책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장기적인 발전을 이루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것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제반정책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환경보전의 정책이나 이야기들은 대부분 조금의 불편을 감수하더라



**이 경 울**  
(사)환경실천연합회 회장

도 환경보호를 위해 또는 안전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 자연을 아끼고 에너지 절약을 생활해야 한다는 대의적 명분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 실천사례를 무시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간과한 채로 그저 그 논리에 무작정 따르게 한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을 것이다.

최소를 지키며, 규제나 법 이전에 국민들의 공감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부.

누구나 에너지를 아끼고 자원을 재활용해야 하는 고유가 시대에 내놓은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단순한 기우(杞憂)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㉔)

(사외(社外)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